

 교육부				<h1>해명자료</h1> <p>2019. 11. 1.(금) 배포</p>	
보도일	배포 즉시				
담당과	홍보담당관	담당자	과장 사무관	최성부(☎ 044-203-6575) 김영현(☎ 044-203-6572)	

엠바고 설정 및 준수는 교육부와 언론사 간의 신뢰 유지와 보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.

- 언론사명 / 보도일시 : 경향신문(송진식 기자) / 2019. 11. 1.(금)
- 제목 : 법무부 이어 교육부도 ‘언론 통제’ 시도 의혹제기

< 동 보도내용에 대한 해명 >

- 교육부는 출입기자 뿐만 아니라 비 출입기자에게도 보도 지원 측면에서 출입기자와 동일하게 주간보도계획 및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 - 엠바고 설정을 포함한 보도계획의 작성 및 수정의 경우 교육부 출입기자 간사단과 사전 협의를 거쳐 확정하고 있습니다.
- 고교서열화 해소방안 및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의 경우도 교육부 출입기자 간사단과 협의하여 세부 내용, 일정 연기 및 연기 사유 등을 엠바고로 설정하였습니다.
 - 그러나, 모 비출입 언론사에서 엠바고를 파기하여 기사화함에 따라 출입기자 간사단으로부터 문제제기가 있어,
 - 교육부 홍보담당관(보도계획 작성 담당 과장)이 엠바고가 파기되었음을 알리고 동 보도를 내렸다가 엠바고 해제 시 보도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.

- 이는 언론 통제가 아니라 교육부와 언론사 간의 신뢰 관계 유지와 언론사들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취한 조치임을 알려드립니다.
- 교육부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요청 등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.

